

 금융위원회	<div> <div>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</div> <div>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</div> </div>			
	<div> <div>보도</div> <div>2021.9.28.(화) 09:00</div> </div>	<div> <div>배포</div> <div>2021.9.28.(화)</div> </div>		
<div>책 임 자</div>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김 성 조(02-2100-2860)	<div>담 당 자</div>	태현수 사무관(02-2100-2861)	
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이 석 란(02-2100-2610)		서지은 사무관(02-2100-2611)	
	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 손 성 은(02-2100-2910)		최상아 사무관(02-2100-2911)	
	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 고 영 호(02-2100-2920)		이혜진 사무관(02-2100-2923)	
	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권 유 이(02-2100-2510)		이용준 사무관(02-2100-2523)	
	금융위원회 뉴딜금융과장 전 수 한(02-2100-1690)		이영평 사무관(02-2100-1692)	

제 목 : 고승범 금융위원장-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

- ◆ 9월 28일(화),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장(8개)과 **취임 후 첫번째 간담회**를 개최하고 소통의 기회를 가졌습니다.
- ◆ 금융위원장은 **코로나19 위기대응**과 함께, **질서있는 정상화**(orderly exit)와 **미래 준비**를 적시성 있게(timely)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히고 **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**하였음
 - ① (취약부문 지원) 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**충분한 정책자금**을 계속 지원
 - ② (금융안정) 완화적 거시정책 하에 누적된 가계부채,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(Imbalance)을 **사전에 엄격하게 관리** 시작
 - ③ (시장기능 복원) 코로나19 비상조치 中 시장원리가 작동 가능하고 시장심리가 안정된 부분은 **점진적으로 정상화**
 - ④ (금융발전과 경제성장) 금융안정 바탕하에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여 ⁱ⁾뉴딜·혁신·탄소중립 등 미래 新산업 자금공급을 확대하고
- 동시에, ⁱⁱ⁾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산업환경에 기존 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
- ◆ 금일 간담회에서는 **이러한 정책과제별 정책금융기관의 구체적 역할**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.

1 간담회 개요

- '21.9.28.(화),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8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취임 후 첫번째 간담회를 열고,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

- 일시 / 장소 : '21.9.28. (화) 08:00~09:05 / 뱅커스클럽
- 참석 : (금융위) 금융위원장, 금융정책국장 / (정책금융기관) 산은 이동걸 회장, 기은 윤종원 행장, 수은 방문규 행장, 신보 윤대희 이사장, 주금공 최준우 사장, 캠프 문성유 사장, 예보 위성백 사장, 서금원 이계문 원장

2 금융위원장 발언 요지 및 주요 논의내용

(1) 코로나19 위기대응과 함께 「질서있는 정상화」와 미래 준비

- 금일 회의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
 -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함께, 질서있는 정상화(orderly exit)와 미래 준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.
- 고승범 위원장은 이러한 정책은
 -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방역·실물·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
 - 「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부문*」과 「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되어야 할 부문」으로 나누어 정책방향을 단계적으로 전환·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고
 - * ① 소상공인·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지원, ②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에 대한 관리 강화, ③ 미래 新산업과 기존 산업의 사업재편 지원
 - 크게 4가지 세분화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① (취약부문 지원) 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

* (예) 중소기업·소상공인 만기연장·상환유예 연장 및 연착륙 / 정책서민금융 지원 등

② (금융안정) 완화적 거시정책 하에 누적된 가계부채, 자산가격 거품 등 금융불균형(Financial Imbalance)을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

* (예) 통화정책의 정상화 / 거시건전성 수단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

③ (시장기능 복원) 코로나19 비상조치 中 시장원리가 작동가능하고 시장심리가 안정된 부분은 점진적으로 정상화

* (예) 증안펀드는 매입약정기간 既종료('21.4월), 채안펀드, 회사채 신속인수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기업자금시장 수급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·제도개선

④ (금융발전과 경제성장) 금융안정 바탕하에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여 ⁱ⁾뉴딜·혁신·탄소중립 등 미래 新산업 자금공급을 확대하고

- 동시에, ⁱⁱ⁾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산업환경에 기존 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

□ 아울러, 금융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이 「버팀목」과 「마중물」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○ 금융시장간, 경제부문간 회복수준 차이를 세밀히 살펴, 취약계층을 한층 두텁게 지원하는 '버팀목(Buffer)' 역할을 수행하고,

○ 산업부문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긴급(Emergency) 지원에서 회복(Recovery) 지원으로 전환하여, '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성장의 마중물'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
□ 고승범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대응과 질서있는 정상화는

○ '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', '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', '미래 전망' 등에 기초한 정교한 설계과정이 필요한 만큼, 정책금융기관,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·논의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.

[2] 금일 회의시 세부 논의사항

- 금일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, 질서있는 정상화 과정에서 정책금융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.

(1)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(만기연장·상환유예 및 정책서민금융 확대)

- 금융위원장은 “질서있는 정상화”의 첫번째 정책과제로
- “만기연장·상환유예”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면서, 잠재부실, 상환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
 - 이에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(신복위원장 겸임)은 “질서있는 정상화”의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
 - 중소기업 부실채권 인수^{채코}과 채무조정 지원 확대^{신복위}를 통해 잠재적 부실우려 부분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·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.
 - 산업은행 회장, 기업은행장,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도
 - 既발표된 유동성 4조원(기존 1.5 + 신규 2.5)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집행하면서, 한도소진 즉시 신규프로그램이 집행되도록 준비하여, 정상화 과정을 뒷받침하기로 하였습니다.

< (참고) 정책금융을 통한 유동성 공급 세부방안 >

① (산은) 약 2조원 공급(재무안정동행^{기존}, 힘내라 대한민국 프로그램^{신규*})

- * (대상) 코로나19 피해 또는 만기연장·상환유예 적용 중소기업
(내용) 금리 우대(최대 △0.9%p), 운영자금 대출(중소 : 최대 600억원, 중견 : 1,200억원)

② (기은) 약 1조원 공급(코로나19 연착륙지원^{기존}, 해내리 대출^{신규*})

- * (대상) 코로나19 피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개인·법인 소상공인
(내용) 금리 우대(최대 △1.0%p),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

③ (신보) 약 1조원 공급(밸류업^{기존}, 코로나19 특별보증^{신규*})

- * (대상) 코로나19 피해 개인·법인 소상공인·중소기업
(내용) 보증료 우대(△ 0.3%p, 최대 1.0% 적용), 보증비율 95%, 기업당 최대 3억원

- 또한, 소상공인·중소기업이 지원프로그램을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선 현장의 안내·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.

□ 특히, 고승범 위원장은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^{서금융}은 앞으로도 지속 확대 공급하여, 서민·취약계층에 대한 ‘안전판’ 기능을 두텁게 보강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-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코로나19 금융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개선·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
(2) 가계부채 관리 강화

□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,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·질·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
□ 이에, 주택금융공사는 서민·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간의 조화로운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모기지 재원배분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고,

-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안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(3) 「뉴딜」, 「탄소제로 2050」, 「혁신성장」 지원

□ 고승범 위원장은 뉴딜, 혁신성장, 탄소중립 등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,

- 新산업·高생산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“정책금융”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□ 특히, 금년 하반기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출발점으로

- 탄소중립기본법 통과('21.8월)에 이어, 10월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,
- 도전적인 목표설정이 예상되므로, 정책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시기라고 강조하였습니다.

□ 산업·기업은행, 신용보증기금, 수출입은행 기관장들은 “정책금융”의 핵심목표 중 하나가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·지원하는 것인 만큼,

-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, 산업별 녹색기술 개발 등을 모니터링 하며, 다양한 녹색특화 금융프로그램(상품)을 적극적으로 새로 발굴·도입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
□ 아울러, 고승범 위원장은 「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」 4차 발굴을 추진(9월말~)하여, 자금지원 수요가 있는 미래 유망기업에 충분한 정책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

※ 「혁신기업 국가대표 1,000」 추진경과

-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미래 유망기업 600개를 선정(1~3회차 선정)
- 선정기업 중 자금수요가 있는 기업에 3.8조원 자금공급('21.8말)
 - * 자금공급('21.8말) : 대출 27,339억원, 보증 6,908억원, 투자 3,899억원

-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既 선정된 600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성과분석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, 혁신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조사(10월중 설문조사 예정)를 통해 향후 보완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.

(4)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사업재편 지원

- 간담회에서는 미래 新산업에 대한 성장자금 공급뿐 아니라, 그간 우리경제의 원동력이 되어 온 기존 산업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.
- 특히, 고승범 위원장은 기업들이 ESG 등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·스마트化 등 '사업재편'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이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-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지난 9.9일에 「K-조선 재도약 전략」을 발표하였고,
 - 금융위도 9.15일, 정책금융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중소기업 경영여건,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,
 - 조선업 호황(6년래 최대 발주량)에도 불구하고, 대형-중소사간 경영여건 개선속도가 양극화되고, 중소기업의 금융여건이 녹록치 않은 만큼,
 - 정책금융기관이 “우리 조선업의 재도약”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 - 특히, 대부분 중소형조선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고, 수주여건도 개선세에 있는 만큼,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RG 발급 등 금융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.
- 이와 관련, 신용보증기금 이사장, 수출입은행장, 산업은행 회장, 기업은행장 등은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
 - RG 특례보증 한도확대,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지원,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

[검토중인 중소조선사 정책금융 지원방안]

- ❶ 중소조선사에 대한 **특례보증**^{신보} 총한도 확대(예: 150억 → 200억)
- ❷ '지방은행 - 신보' 협업을 통해 **RG 활용여건 개선**
- ❸ 중소조선사의 **환경규제 대응, 친환경 기술개발 및 사업재편, 핵심기자재 고도화·국산화** 등을 지원하기 위해 **정책자금 공급 검토**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